

“국가 공권력 훼손 대가… 낮은 형량 선고 유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이후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법원 선고에서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으로 감형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사법 정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

광주 시민사회 “사법정의 출발…국민 법감정과 괴리”

법조계 “향후 내란재판 기준점…역사적 책임 시험대”

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파기하도록 시지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또 ‘현정 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프레스 가이드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하고,

군 고위 인사들의 비화문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경호처의 본래 임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지시이며, 국가 공권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혐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의 평가는 냉담했다. 윤목현 5·18기념재판 이사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점은 지당하지만, 현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관을 사병화한 중대 범죄에 비해 징역 5년은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적 정의에 비춰 더 무너없이 가볍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내란 수괴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계엄의 실제적 범죄성을 은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역시 “권력자 범죄에 대한 판대

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검찰 구형보다 턱없이 낮은 선고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배신이자 사법부의 후퇴”라며 “이런 판단이 반복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현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순상용 광주전남노동인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회 “대통령이라 해도 현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공권력 침해 범죄에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권력 남용 범죄의 재발을 막는 실질적 경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첫 유죄 판단 자체의 상장성에 주목했다.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실제 행동이 정반대였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진행될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법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협회 소속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중대한 공권력 침해”라며 “형량을 떠나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항후 재판과 검찰 구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설 06:38 일설 00:12
해설 17:58 일설 14:53



광주	2~5
목포	1~2
여수	5~7
순천	3~7
구례	1~6
제주	1~4
전남	3~5
진도	2~25
목포	밀물 (고) 02:05 / 15:00 썰물 (저) 07:36 / 20:22
여수	밀물 (고) 09:55 / 21:46 썰물 (저) 03:12 / 15:58

무효 ‘장애인 표지’로 파킹

만년필 ○…무효처리된
‘장애인 표지’로 차주
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로 백화
점 주차장 밸렛파킹을 요청했다
가 적발된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재판장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부착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밸렛파킹 해줄 것을 요청하고 주차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2월 7일 부친의 장애를 이유로 해당 공문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듬해 부친으로 사망으로 주차표지가 무효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범행 일시가 부친 사망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상태인 점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공문서부정행사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미세먼지에 목 칼칼…일상 불편”

고비사막 등 황사 영향

사흘째 이어진 미세먼지가 광주·전남 지역 하늘을 뒤덮으며 시민 일상에 불편을 줬다.

18일 국립환경과학원과 광주지방 기상청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 14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인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기류를 타고 유입된 영향으로 17일까지 안개가 끼듯한 걸은 미세먼지가 관측됐다.

16일 정오 기준 광주와 전남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각각 $63\mu\text{g}/\text{m}^3$, $39\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광산구 평균 $68\mu\text{g}/\text{m}^3$, 전남 장흥을 $66\mu\text{g}/\text{m}^3$ 담양을 $60\mu\text{g}/\text{m}^3$, 영암을 $59\mu\text{g}/\text{m}^3$ 등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였고, 광주 서구 농성동은 $79\mu\text{g}/\text{m}^3$ 로 ‘매우 나쁨’ 단계로 분류됐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 $\mu\text{g}/\text{m}^3$ 이면 ‘나쁨’, 76 $\mu\text{g}/\text{m}^3$ 이상이 ‘매우 나쁨’에 해당한다.

광주 지역에는 지난 15일 오후 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16일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전남 중부·서부 권에도 같은 시각 주의보가 내려졌다. 16일 오전 9시 해제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

탁한 대기 상태로 한때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저

시정 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실제로 16일 오전 주요 지역 가시거리는 전남 나주 70m, 강진·보성 80m, 신안 100m, 곡성 130m, 광주 140m 등이다. 광주·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됐다. 저시정 경보는 가시거리가 350m 이하로 떨어지거나 예상될 때 기상관서·항공교통 업무기관·운항사 등이 협의해 내려진다.

대기질이 계속 나빠지자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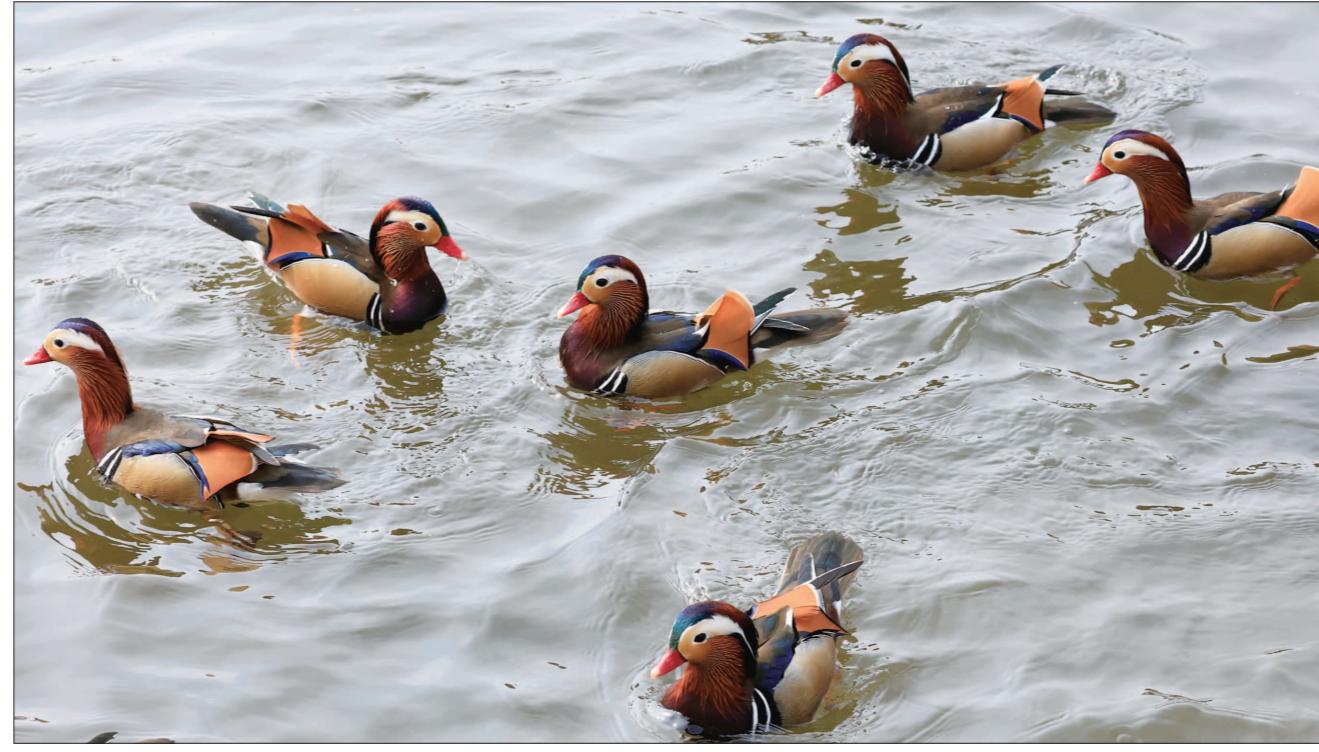
시민들의 외출은 눈에 띄게 줄었고, 광주전번과 종장로 일대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간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였고,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았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를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호흡량이 증가하는 경력 한 이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외출 후에는 손과 발, 눈과 코 등을 허는 물에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원양 가족의 겨울나기 18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캠퍼스내 연못에서 원양가족이 무리 지어 물위를 거닐고 있다. 원양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전국의 산간 계류에서 활동하는 털새지만 겨울에는 북녘에서 번식하는 무리가 남쪽으로 내려와 겨울은 난다. 암컷은 갈색 바탕에 회색 얼룩이 있고 수컷의 몸 빛깔이 아름답다.

광주·전남 교육통합 추진에 시교육청 청사 이전 보류

전남도교육청 감사관 채용도 중단…“특별법 이후 재검토”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교육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양 지역 시도교육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보류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1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서구 화정동 본청의 신청사 이전·신축 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화정동 청사를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해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1300억원 규모다.

신청사 이전 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 이전의 사전 계획 단계로, 당초 연말까지 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광주·전남 교육통합 추진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제정될 특별법과 통합 과정에서의 청사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설계 관련 예산은 일부 편성돼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청 통합 논의 과정에서 청사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만큼,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통합 논의에 따라 주요 인사 절차를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절차를 최근 중단하는 변경 공고를 냈다.

전인 감사관이 허용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면서 후임 감사관 채용을 추진해왔으나, 광주·전남 교육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감사기구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산구, 강설 전부터 ‘설해’ 대비 강화

블랙아이스 사전 차단…제설 상황 신속 공유

광주 광산구가 예비특보 단계부터 제설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겨울철 설해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겨울철 지역난대 대비 종합대책’을 운영하면서, 대설 시 신속한 제설과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난 9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사전 예찰과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0일에는 차량형 제설 장비 9대를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 등 63개 노선 143km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임방울대로, 상무대로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일부 이면도로에는 강설 전 야간 시간대 제설체계를 사전 살피해 새벽 시간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에 대비했다. 송산대교, 산정육교 등에는 지동 염수 살포 장치를 활용해 결빙 위험을 줄였다.

광산구는 기상 상황과 제설 진행 현황을 안내안전분자 등을 통해 신속히 시민에게 전파했으며, 대설 해제 이후에도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블랙아이스 제거 작업을 이어갔다.

광산구는 소금 1278t, 친환경 제설제 193t 등 총 1571t의 제설 자재를 확보했으며, 차량형 제설 장비 4대, 수레형 살포기 14대, 제설 도구 1400여개, 친환경 제설제 111t을 각 동에 추가 배부했다. 이들로써 적설 취약 구조물 12개소, 결빙 취약 구간 7개소, 고립 예상 지역 97개소, 염수 분사장치 16개소를 사전 점검했다.

광산구는 오는 3월 15일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결빙·제설 취약 구간 220개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와 설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 집(상가) 앞 눈 치우기’ 실천 확산을 위해 홍보물 배부와 캠페인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임정호 기자 jh4415@

호남권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자동차 2대 중 1대 이상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 광주전남·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5주간 호남권 고속도로에서 ‘개별 기간 합동 화물지동차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187대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차량 623대(1096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광주·전남·전북 지역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등 17곳에서 총 5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공단 자동차안전단속 원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등이 참여했다. 적발된 1096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 기준 위반이 6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튜닝 141건, 번호판 위반 37건 순이었다.

이중 안전기준 위반에서는 등화장치 불량이 304건으로 최다였다. 후부반사지 불량 146건, 후부안전판 불량 67건 등도 속출, 야간·약천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튜닝은 과적이나 적재 편의를 목적으로 한 구조 변경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물품적재장치(판스프링 등) 위반은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21건, 차체·차대 변경 14건이 뒤를